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로·산단 조성 등 16조 집중 투자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추진

고속도로 지하화로 통행속도 개선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등 구상

서울시가 16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강북 지역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을 본격 추진한다. 교통 인프라 혁신을 출발점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연결해 강북 전역의 도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강북을 서울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교통·산업·도시개발을 연계한 중장기 전략으로, 강북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망·산업 거점 조성에 16조 투입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은 국고보조금과 민간투자 6조원, 시비 10조원 등 총 16조원을 강북 지역에 전략적으로 투입해 교통망을 혁신하고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강북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현금과 공공부지 매각 수입 등을 재원으로 '강북 전성시대 기금(가칭)'을 새로 조성한다.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기금은 강북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 투자된다. 이와 함께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북권에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 투자를 병행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북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 건설

서울시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1.0'에 이어 교통 인프라 구축과 산업·일자리 확충을 포함한 총 12개 사업을 추가해 강북 대개조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핵심은 강북 교통 체계 전반을 혁신하는 것이다.

내부순환로부터 북부간선도로를 잇는 20.5km 구간에는 왕복 6차로 규모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한다. 지하화로 평균 통행속도를 개선하고, 기존 고가도로 철거로 확보되는 지상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편한다. 동부간선도로 역시 월계IC부터 대치IC까지 15.4km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동남·동북권 간 이동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고, 우이신설연장선과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 교통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한다. 우이신설연장선은 총사업비 4690억원을 투입해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3.93km, 정거장 3개소를 신설해 2032년 개통 예정이다. 동북선은 총 사업비 1조7228억원을 투입해 왕십리역부터 상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다.

◆"한국 성장을 이끄는 핵심축으로"

서울시는 강북 전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등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도 도입한다. 주요 거점에는 상업·업무·주거 기능을 집약하고, 간선도로 축을 따라 개발 활력을 확산해 강북 전역을 하나의 성장권역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동북권에서는 창동·상계 일대를 첨단연구개발 중심의 산업단지와 문화시설이 결합된 신성장 축으로 조성한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 공간으로 육성한다. 도심권은 세운지구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을 업무·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랜드마크로 재편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과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16조원의 재원을 집중 투자해 강북을 대한민국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대 자연계 절반, 의·약학 병행 지원

전체 36%, 메디컬 계열 동시 선택
인문계 수험생도 3명 중 1명 지원

2026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 자연계열 지원자 2명 중 1명 가량이 타 대학 의·약학계열에 동시에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병행 지원은 자연계에 그치지 않고 인문계 최상위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가운데 서울대 지원자(예체능 제외) 3028명의 타 대학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자의 36.0%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등 의·약학계열 모집단위에 동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전반에서 의·약학계열 병행 지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 자연계열 지원자 가운데 45.4%가 타 대학 의·약학계열에 동시에 지원해, 2명 중 1명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병행 지원 분야는 의대가 6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대(17.5%), 수의대(6.5%)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흐름은 자연계 전체를 넘어,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이공계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됐다. 서울대 공과대학과 자연과학계열 등 이공계 모집단위에 지원한 수험생들 가운데서도 의·약학계열 병행 지원 비중은 높았다. 공과대학 광역 지원자의 64.8%가 타 대학 의·약학계열에 지원했으며, 전기·정보공학부(60.2%), 수리과학부(55.0%), 화학생물공학부(53.1%), 첨단융합학부(52.7%), 생명과학부(52.2%) 등 주요 모집단위에서도 과반이 의·약학계열에 동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은 인문계열에서도 확인됐다. 인문계열 지원자 가운데 20.9%가 의·약학계열에 지원서를 제출했으며, 인문계 모집단위를 별도로 선발하는 한의대 지원 비중이 57.1%로 가장 높았다. 의대 지원 비중도 22.3%에 달했다.

특히 경영대학(37.2%)과 경제학부(35.0%) 등 인문계 최상위 모집단위에서는 지원자 3명 중 1명 이상이 의·약학계열을 동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메디컬 계열 선호가 특정 계열을 넘어 최상위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번 자료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의·약학계열 선호 현상이 견고함을 보여준다"며 "문·이과 통합 수능 체제하에서 인문계열 수험생까지 이러한 흐름에 합류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7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선발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최상위권 수험생의 '서울대 vs 메디컬' 병행 전략은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외국인학생 생활적응 돕는 한국어책 개발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학교 보급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은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담은 지역맞춤형 한국어 익힘책 '삐뽀삐뽀 학교생활 한국어'를 개발해 20일 관내 학교에 보급한다.

지역맞춤형 한국어 익침책 '삐뽀삐뽀 학교생활 한국어 기본편' 표지 /서울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은 구로·영등포·금천 지역에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교육 여건을 고려해, 단순한 한국어 학습을 넘어 교실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익힘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교재를 개발했다.

익힘책은 '지금 교실에서 바로 써보는 한국어'를 핵심으로, 학교에서 처음 마주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화장실이 급해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등 학교생활 초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언어 장벽으로 교실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입국 초기 학생들이 수업과 일상 의사소통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단원별로 학습 목표를 제시한 뒤 '따라 말해보기', '정리하기', '적용·확장 활동' 순으로 학습이 이어지도록 했으며, 말하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록에 기본 어휘 카드를 활용한 문장 만들기 활동과 활용 팁을 함께 담았다.

/이현진 기자

교육부, 불필요한 학교 업무 없앤다

법정의무교육 조정 등 업무 정비
행정 부담 줄이고 자율성 확대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정비된다. 학생 상장 수여와 교원 연수, 예산 집행 등 학교 운영 전반에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변화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불필요한 업무를 걷어내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개선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조서를 작성하던 관행을 바로잡는다. 교육부는 학생 포상에까지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 발생해 왔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해, 이러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명확히 안내할 계획이다.

교원 연수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과도하게 편성돼 온 법정의무교육을 조정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목을 확대한다.

재정·회계 분야에서는 학교의 예산 집행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추진된다. 예산 집행과 관련한 회계 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고, 출장비 등 각종 경비 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을 함께 안내한다.

아울러 교직원의 호봉 획정과 정기 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학교가 직접 처리하던 행정 업무를 줄여 현장의 부담을 최대한 덜겠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화성·광명·안성·양평 '통합돌봄도시' 선정

경기도, 의료·주거 등 인프라 구축

경기도가 화성시·광명시·안성시·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하고,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한 5대 핵심 인프라를 상반기 중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앞서, 지역별 인구 구조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통합돌봄도시에서 도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5대 인프라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간호·요양 원스톱 패키지 ▲일상복귀 돌봄집 ▲일상복귀 치료 스테이션 ▲AIP 코디네이터로 구성된다.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동네 병원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가정을 방문해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간호·요양 원스톱 패키지는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